

제13호(2012.3.28)

## 최근의 귀농·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

김 정 섭   성 주 인   마 상 진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도농 간 인구 이동 동향 .....   | 3  |
| 2. 귀농·귀촌의 최근 동향 .....    | 6  |
| 3. 귀농·귀촌 인구의 정착 실태 ..... | 10 |
| 4. 시사점과 정책 과제 .....      | 15 |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내용 문의: **김정섭** 부연구위원    02-3299-4252    jskkjs@krei.re.kr  
자료 문의: **원동환** 전문원    02-3299-4274    wondh@krei.re.kr

- 「KREI 농정포커스」는 농업·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-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([www.krei.re.kr](http://www.krei.re.kr)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

## 1. 도농 간 인구 이동 동향

### □ 2000년대 들어 도시-농촌 인구 이동의 추세 역전

- 2000년대는 반세기 동안의 산업화 과정을 표상하는 ‘이촌향도’의 인구 이동이 약화되고 농촌으로의 인구 이동이 두드러진 전환기
  - 2010년에 도시(동)에서 농촌(읍·면)으로 거주지를 옮긴 ‘향촌 인구 이동’ 총량은 약 93만 명이었던 반면, ‘향도 인구 이동’ 총량은 약 83만 명이었음. 이 같은 인구 이동 추세의 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음
  - 농촌에서 도시로 떠나는 인구는 꾸준히 감소했으며, 도시에서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는 일정 수준을 유지
- 2010년에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인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 집단은 30대 연령층으로 그 구성비는 21.4%
  - 2005년에는 20대 연령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
  - 2005년에 비해 2010년에는 40세 이상 연령층의 구성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이 눈에 띈

표 1. 동과 읍·면 사이의 인구 이동

단위: 명

| 구분    | 동→읍<br>(A)        | 동→면<br>(B)        | 동→읍·면<br>(A+B)     | 읍→동<br>(C)        | 면→동<br>(D)        | 읍·면→동<br>(C+D)     | (A+B)<br>/(C+D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001년 | 433,014<br>(4.7%) | 547,565<br>(5.9%) | 980,579<br>(10.6%) | 375,899<br>(4.0%) | 555,829<br>(6.0%) | 931,728<br>(10.0%) | 1.05            |
| 2005년 | 441,606<br>(3.7%) | 482,584<br>(4.0%) | 924,190<br>(7.7%)  | 422,535<br>(3.5%) | 501,766<br>(4.2%) | 924,301<br>(7.7%)  | 1.00            |
| 2010년 | 451,297<br>(4.0%) | 474,828<br>(4.2%) | 926,125<br>(8.3%)  | 378,937<br>(3.4%) | 450,877<br>(4.0%) | 829,814<br>(7.4%)  | 1.12            |

주: 괄호 안의 백분율은 당해 연도 전국 인구 이동 총량 가운데 해당되는 유형의 인구 이동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함.

자료: 통계청,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, 각 연도

표 2. 향촌 및 향도 인구 이동의 연령 분포

단위: 명

| 연령대    | 2005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2010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| 동→읍·면               | 읍·면→동               | 동→읍·면               | 읍·면→동               |
| 0~9세   | 124,751<br>(13.5%)  | 129,887<br>(14.1%)  | 100,973<br>(10.9%)  | 92,899<br>(11.2%)   |
| 10~19세 | 89,970<br>(9.7%)    | 92,072<br>(10.0%)   | 98,451<br>(10.6%)   | 88,387<br>(10.7%)   |
| 20~29세 | 209,131<br>(22.6%)  | 244,862<br>(26.5%)  | 177,352<br>(19.1%)  | 185,503<br>(22.4%)  |
| 30~39세 | 202,359<br>(21.9%)  | 198,366<br>(21.5%)  | 197,968<br>(21.4%)  | 176,223<br>(21.2%)  |
| 40~49세 | 133,354<br>(14.4%)  | 113,410<br>(12.3%)  | 147,078<br>(15.9%)  | 121,050<br>(14.6%)  |
| 50~59세 | 74,582<br>(8.1%)    | 56,931<br>(6.2%)    | 104,134<br>(11.2%)  | 78,582<br>(9.5%)    |
| 60세 이상 | 90,043<br>(9.7%)    | 88,773<br>(9.6%)    | 100,169<br>(10.8%)  | 87,170<br>(10.5%)   |
| 전체     | 924,190<br>(100.0%) | 924,301<br>(100.0%) | 926,125<br>(100.0%) | 829,814<br>(100.0%) |

자료: 통계청,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, 각 연도

## □ 향촌 인구 이동의 주된 목적지는 대도시 주변,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도

-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은 곳들은 수도권, 대구 및 부산광역시 인근 농촌 지역임. 그 다음으로는 강원도, 충청남도, 충청북도 농촌 지역으로의 향촌 인구 이동이 많은 편
  - 도농통합시 가운데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상위권에 드는 곳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으며, 군 지역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남. 부산·대구·울산 광역시에 가까운 곳들이 상위권에 해당
  - 향촌 인구 이동의 상당 부분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생활권 확대 및 교외 지역의 도농 혼주화 현상과 결부
  - 대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향촌 인구 이동 목적지 가운데 강원도, 충청남도, 충청북도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

표 3.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많은 상위 15대 도농통합시와 군

단위: 명

| 도농통합시 | 2010년 향촌 인구 | 군   | 2010년 향촌 인구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|
| 남양주시  | 64,384      | 기장군 | 20,264      |
| 파주시   | 54,049      | 울주군 | 20,073      |
| 화성시   | 28,432      | 청원군 | 17,183      |
| 김해시   | 22,088      | 달성군 | 15,344      |
| 광주시   | 20,644      | 당진군 | 12,575      |
| 김포시   | 19,421      | 칠곡군 | 10,542      |
| 아산시   | 19,091      | 양평군 | 10,471      |
| 안성시   | 15,907      | 완주군 | 10,316      |
| 평택시   | 15,022      | 무안군 | 8,269       |
| 용인시   | 14,600      | 연기군 | 7,710       |
| 포항시   | 13,628      | 여주군 | 7,279       |
| 포천시   | 12,179      | 고성군 | 7,022       |
| 천안시   | 11,998      | 음성군 | 6,155       |
| 양산시   | 11,711      | 화순군 | 5,436       |
| 이천시   | 11,540      | 영암군 | 5,299       |

자료: 통계청, 주민등록 전입신고 자료, 각 연도.

그림 1. 읍·면별 향촌 인구 분포(2010년)



---

## 2. 귀농·귀촌의 최근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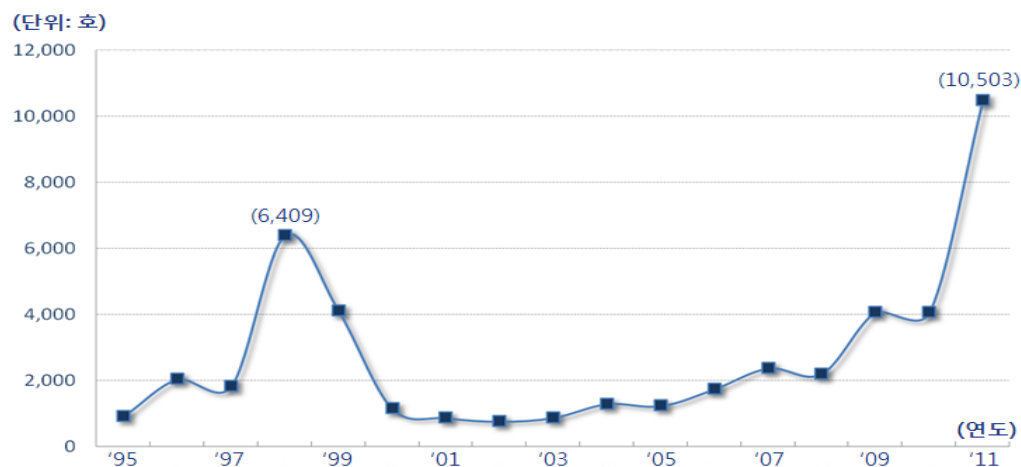
### □ 귀농·귀촌 가구의 증가,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의향도 높음

- 농림수산물식품부의 최근 집계 결과에 의하면, 2011년도 귀농·귀촌<sup>1)</sup> 가구는 총 10,503호로서 전년(4,067가구) 대비 158% 증가하였음. 그 가운데 이주 후 농어업에 종사하는 귀농 가구는 6,541가구였음
  - 귀농·귀촌 추이: ('01) 880 → ('05) 1,240 → ('10) 4,067 → ('11) 10,503호
  - 이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의 귀농 가구 수(1998년 6,409호)보다 많은 것으로 귀농·귀촌 의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
  - 귀농 가구 가운데 주작목으로 경종 작물을 선택한 경우가 52.7%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음. 그 다음으로 과수(17.0%), 원예(13.1%), 축산(6.3%) 등의 순
-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귀농·귀촌이 유의미한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(표 4 참조)
  - 조사마다 조금씩 수치가 다르기는 하지만, 대체로 도시민들의 농촌 정주 의향은 50%를 훨씬 상회

---

1) 농림수산물식품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1년 귀촌 가구는 3,962호였다. '귀농'과 '귀촌'을 구분하여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를 밝히지는 않았다. 이 조사에서 '귀촌 인구'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옮긴 도시민 가운데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2·3차 산업 부문 업체 종사자도 아니면서, 은퇴 후 농촌 생활을 하거나 또는 펜션을 운영하는 도시민으로 정의되었다. '귀촌' 개념에 대한 이 같은 정의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다. 즉, '귀촌 = 은퇴 후 농촌 이주'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. 따라서 이 글에서 '귀촌'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농림수산물식품부의 통계를 인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, 반드시 은퇴 후 농촌 이주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. 이주 후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를 모두 '귀촌'으로 잠정 정의한다.

그림 2. 연도별 귀농·귀촌 가구 추이



자료: 농림수산식품부 자료

표 4. 도시민 농어촌 이주 의향에 관한 주요 설문조사 결과

| 조사 기관  | 조사 시기 | 조사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| 농어촌 이주 의향 비율 |
|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KREI   | 2007년 | 20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2,000명      | 56.3%        |
| 천안연암대학 | 2008년 | 전국 20~50세 남녀 500명           | 63.2%        |
| KREI   | 2010년 | 전국 19세 이상 도시민 1,500명        | 47.7%        |
| 국토연구원  | 2011년 | 서울 등 5대 대도시 거주 베이비부머 1,000명 | 66.3%        |
| 농민신문   | 2011년 | 서울 및 수도권 거주 1,282명          | 74.1%        |
| KREI   | 2011년 | 만 19세 이상 전국 도시민 1,500명      | 63.7%        |

주: 각각의 조사 결과가 담긴 자료의 출처는 순서대로 다음과 같음.

- 송미령 등. 2007. 「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(1/2차연도)」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- 천안연암대학. 2009. “귀농교육 및 사후지원 수요 조사 결과보고서(천안연암대학 내부자료).”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. 2010. “농업·농촌에 대한 2010년 국민의식 조사결과.”
- 김창현. 2011. “대도시 베이비 부머의 이도향촌(離都向村) 특성과 정책대응.” 『국토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 국토계획·지역연구본부 세미나 자료집』
- 농민신문사. 2011. “도시민, 농업·농촌을 말한다: 농민신문사 창간 47주년 맞이 설문조사.” (농민신문 2011. 8. 12일자 제1면)
- 한국농촌경제연구원. 2011. “2011년 농업·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.”

자료: 성주인, 김성아. 2012. “도시민의 귀농·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”. 『농업전망 2012(I): 도농 상생을 위한 농업·농촌 가치의 재발견』 239-263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○ 농업인재개발원에서 도시민(귀농·귀촌 교육을 받은 573명)<sup>2)</sup>을 대상으로 예상 이주 시기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, 도시민의 농촌 이주 수요가 곧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음(그림 3 참조)

- 연령층이 높을수록 빠른 시일 내에 이주를 실행하리라 예상되는 응답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(2~3년 내에 이주하겠다는 비율이 50대는 61%, 60대 이상은 83%), 베이비부머 세대의 농어촌 이주 의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

그림 3. 귀농·귀촌 예상 시기



주: 농업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한 도시민 조사 결과 중 농어촌 이주를 아직 실행하지 않은 응답자(573명)를 대상으로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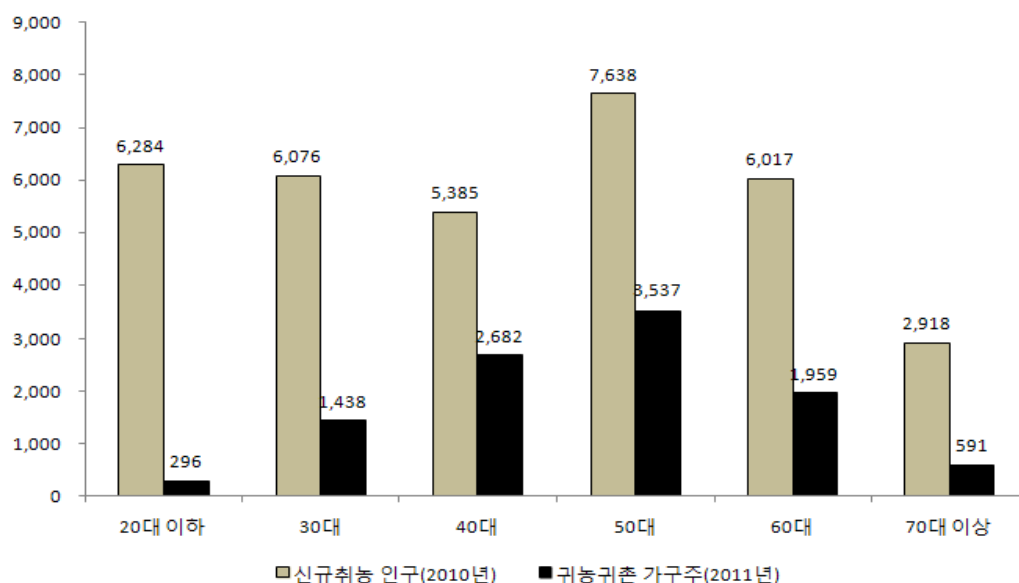
자료: 성주인, 김성아. 2012. “도시민의 귀농·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”. 『농업전망 2012(Ⅰ):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·농촌 가치의 재발견』 239-263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2) 농업인재개발원의 주관으로 201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(조사는 천안연암대학에서 대행) 자료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하였음. 조사 대상은 농식품부 지원 각종 귀농·귀촌 교육 수료생(유효 응답 1,084명)임. 조사 목적상 집단을 크게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, ①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귀농·귀촌인, ② 귀농·귀촌 후 다시 도시로 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응답자, ③ 귀농·귀촌 교육은 받았으나 현재까지 귀농·귀촌을 실행하지 않은 응답자 등이 그것임. 이 중 <그림 3>은 ③번 유형의 응답자(573명)의 답변 결과임.

## □ 신규 취농 인구 가운데 귀농인 비율이 30%를 넘을 것으로 추정

- 2010년 생산 농업 분야<sup>3)</sup>에 신규 취업한 인구<sup>4)</sup>는 34,318명
  - 농림수산물부가 조사한 2011년 귀농 가구 수가 6,541호이고 귀농·귀촌 가구원 수가 평균 2.2.명이었음을 고려하면, 신규 취농 인구 가운데 귀농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어도 30%를 넘을 것임
- 신규 취농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 집단은 50대였으며 (7,638명, 15.7%), 전체에서 40대 이하 연령층은 17,745명으로 51.7%의 비중을 차지
  - 귀농·귀촌 가구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 집단도 50대였으며(3,537명, 33.7%), 40대 이하 연령층은 4,420명으로 전체 귀농·귀촌 가구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42.1%

그림 4. 신규 취농 인구와 귀농귀촌 가구주 연령 분포 비교



자료 1: 통계청. 2010. 지역별 고용조사.

자료 2: 농림수산물부. 2012. 귀농·귀촌 가구 조사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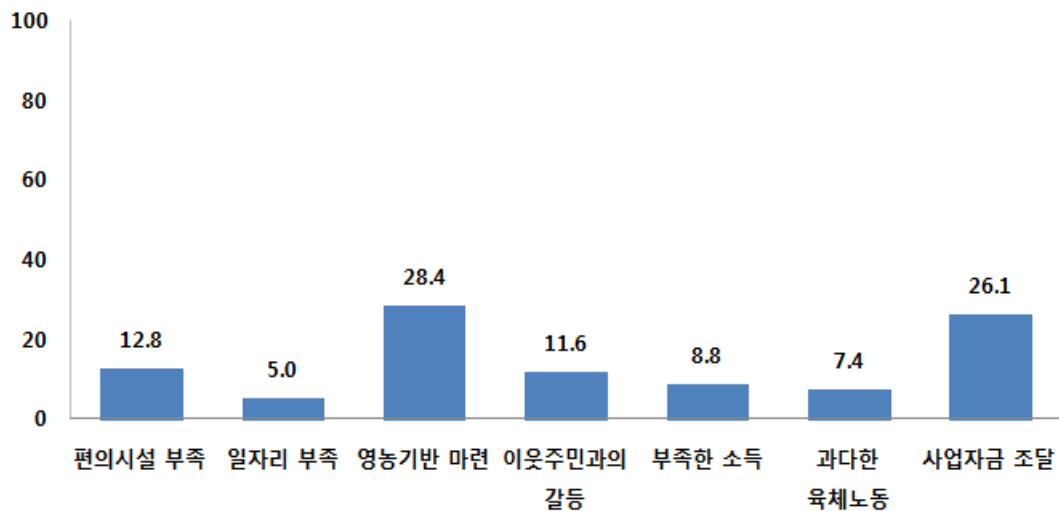
- 3) 한국표준직업분류(6차 개정)에서 농림어업숙련노동자(대분류) 중에 농/축산숙련직(중분류)에 해당하는 사람
- 4) 2010년 조사시점(9월) 이전 1년 이내(2009년 10월 ~ 2010년 9월)에 농업을 시작하였고, 전체 영농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

### 3. 귀농·귀촌 인구의 정착 실태

#### □ 소득 감소 등 경제적 문제가 귀농·귀촌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

- 귀농·귀촌인이 농어촌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 중 가장 큰 것은 대체로 경제적인 문제임<sup>5)</sup>
  - 귀농·귀촌인들이 겪은 가장 큰 애로 사항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(그림 5), 영농기반 마련, 사업자금 조달 등을 응답한 비율이 높음
  - 농어촌에 이주한 후 정착에 성공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재이주한 응답자의 귀농·귀촌 실패 이유를 보면(그림 6), 일자리 부족, 소득, 사업 자금 조달 등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되는 항목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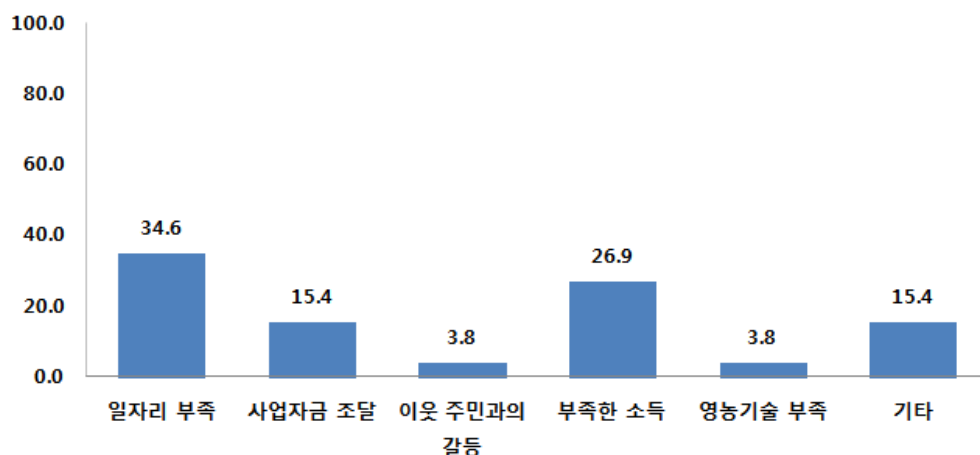
그림 5. 귀농·귀촌 정착 시 애로사항



주: 농업인재개발원 조사 자료 중 귀농·귀촌을 실행한 응답자의 답변 결과를 집계  
자료: 성주인, 김성아. 2012. “도시민의 귀농·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”. 『농업전망 2012(Ⅰ):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·농촌 가치의 재발견』 239-263. 한국농촌경제연구원.

5) <그림 5> 및 <그림 6>의 결과는 농업인재개발원 조사 자료로서 각각 귀농·귀촌을 실행한 487명 및 귀농·귀촌 후 정착하지 않고 도시나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동한 응답자 26명의 답변 결과를 집계한 것임.

그림 6. 귀농·귀촌 실패 이유



주: 농업인재개발원 조사 자료 중 귀농·귀촌 후 정착하지 않고 도시나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동한 응답자의 답변 결과를 집계

자료: 성주인, 김성아. 2012. “도시민의 귀농·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”. 『농업전망 2012(I): 도농상생을 위한 농업·농촌 가치의 재발견』 239-263.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- 귀농·귀촌인의 상당수가 충분한 자금 없이 이주를 하고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그만큼 클 수밖에 없음
  - <그림 7>은 농어촌 이주를 준비 중인 도시민들의 이주 예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인데,<sup>6)</sup>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귀농·귀촌 시 2억 원 미만의 비용을 투자할 것이라고 답함
  - 이 정도 액수는 대지를 구입하여 신규로 주택을 짓고 나면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규모임. 따라서 곧바로 소득을 올리기가 힘든 이주 초기에 귀농·귀촌인의 상당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됨

6) 농어촌 이주를 준비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2007년 조사한 결과이다(송미령 등. 2007. 『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』. 한국농촌경제연구원).

그림 7. 도시민의 농어촌 예상 이주 비용



주: 송미령 등(2007)의 조사 중 농어촌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의 조사 결과를 재집계

#### □ 농어촌 이주 후 적응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

- 농어촌에 이주한 후 귀농인이 정착 기반을 갖추기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
  - 귀농인의 영농 규모를 거주 기간별로 비교해 보면(표 5 참조), 농어촌에 이주한 지 오래된 응답자일수록 대체로 영농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
  - 귀농·귀촌 후 거주 기간별로 생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(표 6 참조), 농어촌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으로 긴 응답자들이 최근 이주한 집단에 비해 현재의 농어촌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(전체적으로 82.5%가 ‘매우 만족’ 또는 ‘만족하는 편’이라고 응답)
- 귀농·귀촌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은 이주 직후 단계이며, 이때 귀농·귀촌인이 겪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시사

표 5. 귀농인의 영농 규모(거주 기간별 비교)

단위: %

| 영농 규모      | 귀농·귀촌 후 농어촌 거주 기간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전 체<br>(n=470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1년 미만<br>(n=182)  | 1~2년<br>(n=146) | 2~5년<br>(n=102) | 5년 이상<br>(n=40) |                |
| 3ha 이상     | 3.8               | 7.5             | 12.7            | 10.0            | 7.4            |
| 1~3ha      | 13.2              | 22.6            | 22.5            | 30.0            | 19.6           |
| 0.1~1ha    | 41.2              | 41.1            | 39.2            | 27.5            | 39.6           |
| 0.1ha 미만   | 3.3               | 2.7             | 3.9             | 2.5             | 3.2            |
| 축산         | 0.5               | 2.7             | 2.0             | 2.5             | 1.7            |
| 미상/ 기타     | 6.6               | 8.2             | 6.9             | 10.0            | 7.4            |
| 경지 없음/ 무응답 | 31.3              | 15.1            | 12.7            | 17.5            | 21.1           |
| 합 계        | 100.0             | 100.0           | 100.0           | 100.0           | 100.0          |

주: 농업인재개발원 조사 자료 중 귀농·귀촌을 실행한 응답자의 답변 결과를 집계

표 6. 귀농·귀촌 생활 만족도

단위: %

| 구 분     | 귀농·귀촌 후 농어촌 거주 기간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| 전 체<br>(n=470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 | 1년 미만<br>(n=182)  | 1~2년<br>(n=146) | 2~5년<br>(n=102) | 5년 이상<br>(n=40) |                |
| 매우 만족   | 19.2              | 21.9            | 28.4            | 50.0            | 24.7           |
| 만족하는 편  | 42.3              | 45.2            | 29.4            | 32.5            | 39.6           |
| 보통      | 32.4              | 24.7            | 34.3            | 12.5            | 28.7           |
| 불만족하는 편 | 5.5               | 7.5             | 6.9             | 5.0             | 6.4            |
| 매우 불만족  | .5                | .7              | 1.0             | .0              | .6             |
| 합 계     | 100.0             | 100.0           | 100.0           | 100.0           | 100.0          |

주: 농업인재개발원 조사 자료 중 귀농·귀촌을 실행한 응답자의 답변 결과를 집계

## □ 지원 시책은 주로 도시민 유치 자체에 초점을 둔 상황

- 귀농·귀촌인(146명)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조사한 결과,<sup>7)</sup> 농어촌 이주·정착 과정에서 주거나 소득 관련 지원은 일부만 받은 것으로 나타남 (그림 8 참조)

7) 2011년 농식품부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례 지역(충남, 전북, 경북의 3개 시·군 대상) 조사 결과이다(성주인 등. 2011. 「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」. 한국농촌경제연구원)

- 농어촌 이주 과정에서 지원 받은 정부나 지자체 시책 중 응답률이 낮은 하위 5개 항목은 빈집 정보 제공, 전원주택단지 조성, 임시 거처 마련, 농지 알선, 지역 내 일자리 제공 등
- 농어촌 이주 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겪는 도시민들이 많지만, 실제 정책 지원 시책은 도시민의 농어촌 유치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많다는 것을 시사

그림 8. 귀농·귀촌 시 지원 받은 정부·지자체 시책



주: 2011년 농식품부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로 진행된 귀농·귀촌인(146명) 조사 결과  
 자료: 성주인 등, 2011. 「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」,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## 4. 시사점과 정책 과제

### □ 귀농·귀촌은 단순한 주거 이동이 아니라 새로운 직업 선택과 인간관계 형성을 수반하는 생애주기의 중요한 의사결정

- 도시민이 귀농한 후 초기에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귀농에 따르는 리스크를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
  - 농촌에서는 농업을 비롯한 많은 종류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나 기회가 지역사회 내 사회적 관계를 통해 매개된다는 특수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농촌에는 농업뿐만 아니라 교육, 보육, 문화, 의료,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 분야의 노동 수요가 점증하고 있음
  -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귀농·귀촌 인구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통합시키려면 경제활동인 동시에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

### □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·귀촌 정책을 본격 추진 중

-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14일 귀농·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‘귀농·귀촌 정책’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대책을 발표
  - 귀농·귀촌종합센터 설치(One-Stop Service 체계 확립)
  - 직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귀농·귀촌 교육 확대
  -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재정 및 세제 지원 확대
  - 농어촌 체험, 멘토링 등 지자체의 도시민 유치 활동 강화
  -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 추진
  - 법적 지원 근거 및 지자체 행정체계 정비

---

□ 귀농·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농촌 지자체의 대응을 준비하는 것

- 최근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대책은 대체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, 귀농·귀촌 의향이 있는 도시민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음
  - 그리고 ‘가급적 많은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촉진하는 것’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줌<sup>8)</sup>
- ‘귀농·귀촌 정책’의 목표는 단순히 귀농·귀촌을 양적인 측면에서 촉진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됨
  -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만큼 농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결론 내릴 만한 경험적 근거는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음
  - 급작스런 인구 이동량 증가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‘귀농·귀촌 정책’은 귀농·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면서, 다른 한편으로는 귀농·귀촌 인구를 받아들이는 농촌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·부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어야 함
  -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학적 구성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사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사회자본(social capital)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귀농·귀촌이라는 사회적 트렌드의 확산에 대응할 수 있게 준비하는 정책이 되어야 함

---

8) 2012년의 정책 목표를 귀농·귀촌 가구 2만 호를 달성하는 것으로 두고 있다(농림수산식품부 2012년 2월 24일자 보도자료).

## 「KREI 농정포커스」 발행 목록

### 2012년

- 제13호 최근의 귀농·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(김정섭, 성주인, 마상진)
-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(최경환)
-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(황의식, 김동훈)
-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(채광석)
-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(TPP)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(최세균, 정대회)
-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(정민국, 우병준, 이형우)
-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(박대식, 마상진)
-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(김정호, 최지현, 국승용, 박시현)

### 2011년

- 제 5호 2011년 농업·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(김동원, 박혜진)
- 제 4호 한·미 FTA,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(최세균)
-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
-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- (문한필, 김경필, 어명근, 전형진)
-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(한석호, 승준호)
-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(이용선, 서대석)



---

KREI 농정포커스 제13호

최근의 귀농·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

---

등 록 제6-0007호(1979. 5. 25)

인 쇄 2012. 3. 27

발 행 2012. 3. 28

발 행 인 이동필

편집위원 김정호, 김창길, 박시현, 박준기

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130-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-102

02-3299-4000 <http://www.krei.re.kr>

인 쇄 문원사

02-739-3911 [munwonsa@hanmail.net](mailto:munwonsa@hanmail.net)

---

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  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.
-